

18일 대구 지하철참사 4주기 상처 치유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오는 18일은 대구지하철 방화 사고가 일어난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만도 140여명이나 된다. 대구시가 종합건강검진, 진료비 지급, 부상자 돌보기 사업 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기엔 역부족이다. 일부 유족은 "지하철의 '지' 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한다. 참사의 기억과 치유대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통곡의 벽은 어떻게

중앙로역 지하 2·3층에 사고 당시 상태로 봉인된 '통곡의 벽(추모의 벽)' 보존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다. 가로 20m 규모의 이 벽에는 타다 남은 대합실 사물함, 공중전화 부스, 전동차 지붕 등이 사고 당시 그대로 남아 있다. 지하철희생자대책위원회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부상자가족대책위 측은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며 철거를 적극 주장하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다. 시와 지하철공사측은 두 단체의 합의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복지재단 설립은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을 돕고 안전홍보 활동 등을 펼치게 될 복지재단 설립 역시 난제다. 일단,

시는 국민성금 중 76억원을 투입해 재단 설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상자가족대책위측은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재단 설립 대신 위기상담관리센터 개설이나 성금 배분 등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지하철희생자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정기총회를 통해 시에 조속히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원 미확인 시신 6구는

아직도 가족을 못 찾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칠곡 현대공원에 안치된 주검도 문제다. 6구 중 3구는 DNA가 확인됐으나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았고, 3구는 고열로 DNA가 파괴돼 신원 확인을 위한 주요 인자를 추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이 6구에 대해 배정된 26억원가량의 보상금도 손배기간 청구 시효 등이 끝날 경우 수령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전망이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청소용역노조 등은 16일 대구시 중구 교보문고 앞에서 '대구지하철 참사 4주기 노동자 추모제'를 갖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결의를 다짐 계획이다.

갈태웅기자 tuka1@yeongnam.com